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공익형직불제 소분과 3차 회의 결과보고

1. 개요

□ 일시·장소 : 2019년 11월 8일(금), 15:00 ~ 18:00, 농특위 대회의실

□ 참석 인원 : 20명

○ (분과위원) 김영재(분과위원장), 강마야 위원, 김현대 위원, 김현아 위원, 박종서 위원, 윤금순 위원, 정명생 박사(KMI, 엄선희 위원 대참), 정준수 사무관(산림청, 엄상섭 위원 대참), 정학철 위원, 양준일 본위원

○ (관련기관) 이명헌(인천대), 김태훈·김유나(이상 KREI), 변혜중(해수부), 배재수·장주연(이상 산림과학원)

○ (사 무 국) 오현석 사무국장, 손영준 농어업정책팀장, 김창호 전문관, 이상규 전문관

2. 회의결과

□ **(연구용역 진행사항 점검)** '농식품 재정구조 개편 및 농정추진체계 재편 방안 연구(이명헌)', '농업의 공익적 역할제고를 위한 직불제 개편 방안 연구(김태훈)'의 연구용역 과제 수행결과를 공익형직불제 소분과와 공유

□ **(수산 부문 공익형직불제 추진 점검)** 해수부에서 추진 중인 '수산 부문 공익형직불제 도입방안' 관련 추진 상황을 공익형직불제 소분과와 공유

□ **(주제발표 주요내용)**

○ '농정예산구조 개편, 방향과 과제(이명헌)'

- '농식품 재정구조 개편 및 농정추진체계 재편 방안' 연구용역에서는 농업재정 구조개편의 필요성을 국민경제와 사회가 농업·농촌에 요구하는 변화라는 측면에서 도출
- 현재까지 농업재정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추진하고, 구조개편의 방향성과 방안 도출

- 농정추진체계 관련 농식품부 및 도, 시·군 계획 수립·운영 및 실행 방식을 분석하고, 지역 중심 새로운 농정추진체계 구축방안 제시

○ ‘직불제 중심의 농정방향 개편 연구 추진경과(김태훈)’
- 공익형직불제 개편안으로 본 쟁점은 다음과 같음.
- 공익형직불제 목적으로 소득보전 제시 여부(소득증대 보다 환경·생태 보전을 통한 공익제고)
- 공익형직불제의 범위(농업생산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활동으로 설정)
- 공익적 기능에 대한 개념과 직불금의 대상여부(식량안보 등)
- 직불금 형평성 문제(대농과 소농, 쌀 타품목 간 형평성 등)
- 경영안정장치로 가격변동대응직불 도입 여부(농가의 가격리스크 완화)

○ ‘수산분야 공익형직불제 도입방안(변혜중)’
- 수산 부문 공익형직불제는 ‘어업인에게 일정한 공익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면 대가를 지급하는 제도’로 정의
- 추진방안으로 기본직불제는 **조건불리지역·접경지역·경영이양**, 부가직불제는 (어선어업) **자율휴어·자원회복·친환경어구**, (양식어업) **친환경 수산물·배합사료·어장휴식**
-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 개정 추진(’20)
- 재원은 기존 보조사업 전환 등 구조조정과 추가재원 확보로 마련

□ **(주요 논의 내용)** * 발언순으로 정리

(1) ‘농정예산구조 개편, 방향과 과제(이명헌)’
○ (정명생) 농정 예산구조 개편의 필요성과 구조개편의 방향 사이에 ‘선진국의 사례’를 제시하여 국가들의 변화를 전달해주었으면 함.
- 농정추진체계 재편에서 세수분권에 대한 전제조건 제시 필요

○ (김현아) 농업예산구조 변화의 수치화된 로드맵은 오히려 제시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임. 그리고 포괄보조금은 상향식 제도이지만 중앙의 간섭을 받으므로 시군구의 불만이 상당함.

- 국세와 지방세의 예산 비중이 7 : 3 수준임. 로드맵을 제시할 때 농업 부문 세수는 줄 수밖에 없음.
- 포괄보조금 사업의 전체적 내용에 동의하며 세부적인 내용은 추가 제시 필요

○ (박종서) 정책목표 측면에서 농정예산의 변화의 수치화된 로드맵 제시는 연구에서 필요함.

○ (강마야) 조직과 인력에 대한 내용 제시 필요, 불용예산 감축에 동의함. 또한 개도국 지위 포기와 선진국 농정으로의 개편 등 농정예산 개편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결국 두 연구용역이 마지막에 만나야할 것임. 직불제 중심 농정으로 개편될 경우 추진체계개편에서 공무원들의 업무가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업무 변경에 대한 안 제시 필요
- 이명헌 교수님 연구는 하향식 방식이고, 김태훈 박사님 연구는 상향식 방식이므로 결국 마지막에는 서로 연계하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임.

○ (이명헌) 가장 고민 중인 부문이 수치화된 로드맵 제시하는 것임. 정책위 보고서 상 1조원씩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 어떻게 내용을 제시할 것인지 고민 중임.

○ (김태훈) 두 연구의 연계 부문을 고민 중임. 직불제 개편 연구에서는 세부활동을 중요하게 보고 있음. 세부활동에 대한 단가를 추정하고, 마을·지역 단위 등 예산소요를 추정할 수 있을 것임. 그리고 시나리오 수립 후 분석이 가능하며, 시나리오별 예산을 이명헌 교수님께 전달하면 두 연구간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이명헌) 어떤 사업예산을 줄일 것인지 제시하기 어렵지만 기준 제시는 가능할 것임.

(2) ‘직불제 중심의 농정방향 개편 연구 추진경과(김태훈)’, ‘수산분야 공익형직불제 도입방안(변혜중)’

○ (정명생) 수산 부문 공익형직불제 도입안과 관련 농업 부문은 직불제를 오랜기간 운용해왔고 많은 논의가 이뤄짐. 방향성에 대해 동의하며, 수산 부문에서 농업 부문과 동일하게 추진하는 것은 어려울 것임. 전체적

틀과 방향성은 맞추되, 수산의 특징을 반영하여 공익형직불제 도입안을 제시할 것임. 부처 협의가 필요하여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임.

○ (김영재) 사무국에서는 농업과 수산 공익형직불제를 같이 제시될 것임.
- 현장에서 기본소득·농민수당에 대한 반응이 뜨거움. 이들의 공익형직불제와 연계를 연구에서 제시 필요
- 의무준수의 기준이 해외사례와 함께 제시 필요
- 축산 부문이 공익형직불제에 포함되어야 하는 의견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분석 필요함. 예를 들어 경축순환 농가에서 축산퇴비를 사용할 경우 공익형직불 수혜대상에서 포함하는 경우 등.

○ (강마야) 축산 부문의 공익형직불제 포함에 동의함. 축종별로 구분되어야 하며,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양돈농가에 대해서만 포함시켜야 할 것임.

○ (정학철) 공익형직불제와 가격안정 및 경영안정의 두가지 중요한 축이 있음. 출발점에서 고민이 필요함. 이에 대한 고민없이 농민들의 동의를 얻기 힘듦. 또한 농촌에 거주하는 것만으로 공익형직불제의 수혜대상이 되어야 할 것임. 그리고 의무준수의 기준은 매우 기초적인 기준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임.

○ (김현대) 농민들의 동의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현재 농업예산 확대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여론이 존재함. 따라서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핵심 과제임. 국민을 설득하고, 파괴력을 가지기 위해 축산 부문이 공익형직불제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그리고 유럽의 경우와 같이 농업이 환경·생태적 지원체계로 옮겨가는 것으로 공익형직불제가 설계되어야 할 것임.

○ (최준호) 농업 부문과 달리 환경 부문에 축적된 많은 데이터가 존재함. 이들 데이터를 이용하여 빅데이터화할 필요 있음. 또한 농업 생산과정에서 의무준수를 이행해야 직불금을 줄 정도로 농업이 환경·생태에 문제가 된다는 인식을 줄 수 있음. 이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함.

□ (**향후일정**) 농특위 주요일정과 맞추어 소분과 의제선정 및 연구 추진

ㅇ 공개토론회 : 일정 확인 후 12월 중 개최 계획

ㅇ 비전선포식 : 12월 둘째주 개최 계획

ㅇ 분과위원회 : 11월 22일(금) 예정

ㅇ 본회의 : 12월 3일(화) 예정